

파견업체 직원 등 6명이 10년간 낙찰가 조작

구멍뚫린 한전 입찰 시스템

자회사 한전KDN, 관리 맡겨놓고 감시 허술 계약 만료되면 후임자 물색해 수법 전수 오피스텔 35채 사고 집엔 현금 수익 쌓아놔

국내 최대 공기기업에도, 한국전력의 시스템 관리 방식은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간 4조4000억원 규모의 입찰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을 일개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서도 내부 비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기능은 10년 가까이 작동하지 못했다. 한전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해오던 한전 KDN이라는 공기기업이 설립됐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역할을 일개 파견업체에게 맡기는 무능함마저 드러냈다.

◇입찰 비리 어디까지=한전이 진행하는 연간 입찰 건수는 대략 3만9000여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4조4000억원 규모다.

자체 구매 관련 입찰 2만여건(2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전기공사와 관련된 입찰 건수는 대략 1만9000여건(1조8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83개 전기공사업체가 133건(2709억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파견업체 직원들이 한전의 모든 입찰 시스템을 총괄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기공사 뿐 아니라 한전 자체 구매까지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검찰 수사팀의 분위기다.

◇입찰 어떻게 진행되길래=한전은 모든 입찰을 전자방식으로 하는데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범위(±2.5%) 등 기본 사항을 적어 공고한다. 투찰 마감 하루 전 오후 4시께 기초금액의 ±2.5% 범위에서 1천365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 이 가운데 15개를 임의로 선택, 압축화한 뒤 15개 추첨번호에 하나씩 배정한다.

입찰자는 15개 중 4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고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번호 4개에 배정된 예가를 평균해 공사 예정 가격을 산출한 뒤 투찰률(공사액 10억원 미만 87.745%, 10억~30억원 86.745%)을

곱한 낙찰 하한가를 산정한다. 낙찰 하한가와 가장 근접해 그 이상 투찰가를 입력한 입찰자가 최종 낙찰되는 방식이다.

전기공사업체가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2곳만 낙찰되더라도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같은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쓰는 것과 낙찰되는 것이 무관해 한전측도 애초 전기업체에서 입찰 비리의혹이 제기될 때도 이같은 점을 내세워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견업체 직원들은 15개 추첨번호를 무작위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배정되도록 순열을 조정했다. 2주 이상 진행되는 입찰기간 동안 업체들이 선택하는 추첨번호 4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낙찰 하한가를 예측하는가 하면,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한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리에 활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찰 경쟁률이 최고 5736대 1에 이르는 '로또'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검찰도 "관련 분야에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업체 입소문나 커미션 올릴 정도인데...=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 박모(40)씨와 이모(39)씨 등 4명이 공사업자 모집자를 병행하는 주모(40)씨와 공모, 불법 낙찰을 도와주고 받은 '뒷돈'은 134억원. 범행 초기만 해도 공사 대금의 1%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누구를 통하면 틀림없다"라는 입소문이 난데다, 마진율 높고 배전공사의 경우 향후 2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커미션은 무려 10%까지 올랐다.

가담자들은 받은 돈으로 광주지역 오피스텔 35채를 사는가 하면, 500만원짜리 현금 묶음피자를 모아놓았고 아예 술 데를 마땅히 구하지 못해 금고에 현금으로 4억 1500만원을 쌓아놓기도 했다.

이런 비리 행위가 지난 2005년부터 지



김종범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16일 광주지검 브리핑실에서 '한전 전자입찰시스템 조작·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파견업체 직원이 공사업자들에게 받은 5만4천원 4억원 등도 압수돼 공개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난해 11월까지 이뤄졌지만 한전과 한전 KDN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게 이틀 해명이다. 한전은 앞서 적발됐던 '관행화'된 지역사업소별 공사 뒷돈 비리도 파악하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뒤에야 인정했다. 입찰 비리 외에도 나주시 등 전·현 직원들이 업체들에게 월급을 받다시피 뇌물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거대 공기기업의 허술한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한전은 ▲전자입찰시스템을 내부 인력이 운영하고 ▲핵심 전산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 위탁 금지 등 전자 입찰 시스템 전면 개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고 입찰 비리에 연루된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뒤 재입찰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방화복 빌려입고 출동하는 광주 소방관

'가짜 방화복' 984벌 구매 476명 기본 장비 못 갖춰

정부가 품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납품된 '불량' 방화복에 대한 수거 및 착용 중단 지시를 내린 뒤 광주지역 소방대원들이 동료 장비를 빌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6일 국민안전처가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납품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방화복에 대해 착용중지 조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우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D)의 성능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방화복이 지난 2013년 구매분인 경우 150벌, 지난해 834벌 등 총 984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전체 소방인력 1109

명에게 지급된 방화복(2156벌) 중 '불량' 방화복 984벌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방화복(539벌)을 제외하면 현재 소방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화복은 633벌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방화복 수치를 보면 소방관 476명이 개인 방화복이 없어 빌려 입고 근무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소방관들은 전 근무자와 교대하면서 방화복을 빌려 입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내근직 대원들의 방화복을 현장요원들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편, 전남도소방본부는 성능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방화복을 1벌로 파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김철주 무안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6일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를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검찰 수사에

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막판 참고인에 대해 회유까지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민선 6기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중 김 군수 이외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전기부행위 고발

합평축협 압수수색

합평경찰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합평축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6일 합평축협에 수사관을 보내 CCTV 영상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영상자료엔 지난해 12월 말

부터 지난달 말까지 합평축협 본점 안팎을 찍은 두 달 분치 영상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합평축협 한 조합장 후보가 사전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CCTV 화면분석을 통해 합평축협 안팎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국제사기 '캠코' 핵심인물 2년만에 법정 구속

국제사기 논란 끝에 무산된 광주시 한미 합작 투자사업(일명 캠코 사업)의 핵심 인물인 기소 2년여만에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사업자 측에 광주시 내부 정보를 건네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자문위원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500만 원을 같은 자문위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이 취소된 김씨를 포함해 피고인 3명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이용한 문화사업은 광주시로서는 첫 시도였고 투자금도 고액이어서 사업성이 미국 사업자의 자금조달력, 기술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지만 자문위원의 의문 제기에도 관련 검토를 하지 않는 등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김씨가 주장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강 전 시장의 형사적 책임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강 시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가 책임을 모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1~7월 광주시와 합작한 미국 측 사업자인 K2AM(모회사), K2 Eon(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송금하고, 70만달러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설 돈 마련하려 편의점 강도짓 40대 '쇠고랑'



○...설 연휴를 앞두고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설 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임모(48)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40분께 목포시 석현동 A편의점에 침입, 종업원(24)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금 5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지난 2010년 교도소를 출소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목포 인근에서 일을 해온 임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고향인 경기도 의정부로 가려던 중 설 설 돈이 없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있는 A편의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CCTV 화면분석 등을 통해 임씨를

검거.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33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3천1백20만원

문의. 010-3605-5000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가능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급매 - 1억 5500만원

빌라 "급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베스트 이비인후과 신우신협
오상근외과
신우APT 제5동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17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수리
- 매매 - 5천1백만원

근린상가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 급매가 - 55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했습니다.

문의. 010-3605-5000